

## “문제는 재벌, 해법은 총파업”

### 금속노조, 11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열어... “재벌 적폐 청산, 노조법 개정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금속노조는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 개정,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금속노조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 모인 노조 확대 간부 3,000여 명은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횡포와 적폐를 이대로 놔두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본은 주 52시간 상한제와 최저임금 개악도 모자라 주휴수당까지 없애겠다는 전쟁의 신탁탄을 쬐다. 이번 11월 21일 총파업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금속노조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투쟁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문제는 재벌이고 해답은 총파업이다. 이제 앞뒤 재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 노조와 확대 간부가 모두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자”라고 뜨겁게 호소했다.

투쟁사에 나선 강태희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장은 “본사인 알루코 자본은 파업을 깨기 위해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하더니, 이제 손배 가압류 운운하며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라고 한다”라고 분노했다. 지회는 단체협약 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58일째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 분리로 노조를 무력화한 후 ‘먹튀’를 준비하고 있는 지엠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지엠지부는 10월 24일부터 청와

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임한택 한국지엠 지부장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법인 분리를 결정한 주주총회 개최 무효와 기각 신청해라”라고 요구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금속노조 깃발 아래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정병준 경남지회 삼성테크윈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투쟁을 통해 교섭 대표 지위를 쟁취했으나, 한화 자본은 방산업체 파업 금지법을 악용해 입단협 교섭을 지연하며 우리가 지켜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병준 지회장은 “방산업체 노동자들도 냉전 시대 논리에서 벗어나 온전한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기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친 확대 간부들은 김호규 위원장 사회로 ‘재벌이 문제야, 재벌을 뒤집자 문화제’를 이어갔다. 재벌 개혁 투쟁을 소개하는 영상과 문화공연에 이어 재벌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박원우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검찰이 노조과피를 수사하고 있지만, 삼성 자본은 지나가는 소나기라 생각하며 아직도 숨어서 광기 어린 노조과피 공장을 벌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세상을 위해 재벌에 맞서 올들의 연대를 구축하자”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11월 21일 총파업을 준비하며 재벌 적폐 청산 요구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재벌의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재벌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 확대 ▲원청의 하청사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노동개입과 교섭가이드라인 청산 ▲노동자 대표 사외이사 추천권, 회사의 선임 의무 ▲지주회사를 통한 탈분법 3세 세습 금지를 내걸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해 ▲산별교섭 법제화 ▲재벌사의 불법과건 비정규직 사용금지 법 ▲타임오프제 철폐 ▲복수노조 창구단일 화제 폐지 ▲노조 쟁의행위 시 손배가압류 금지 ▲방위산업체 쟁의권보장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강화,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노조과피·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포스코, 대농고 금속노조 지회 와해 시도”

노동자를 ○, △, X 표시로 분류, 전사 차원 탄압 기획 ... “노조탄압 경영진 갈 곳 교도소뿐”

포스코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조는 10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포스코 현장 상황 보고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포스코는 노동자를 회사에 우호적인 그룹, 불만가입의사, M(민주노총) 가입 의심/확인 그룹으로 나눠 각각 ○, △, X 표시로 분류하도록 했다.

포스코 차원에서 기업노조 가입을 독려한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회사는 노무관리 부서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개별 관리하며 금속노조 가입을 막았다. 회사 게시판 익명 댓글을 통해 포스코지회에 관한 거짓 선전을 퍼뜨리고, 지회의 선전물을 압류하는 등 현장 활동을 방해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오늘 제시한 탄



안 사례는 포스코가 벌인 노조탄압 가운데 대표 사례다. 포스코의 민주노조 탄압 방식 가운데 방산의 일각을 밝혔을 뿐이다. 즉시 탄압을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 사례처럼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조를 탄압하면 경영진이 갈 곳은 교도소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정 노조 포스코지회장은 “회사가 노무관리 부서의 직책수당을 올리고, 연말에 시행하는 인사평가를 10월로 당겨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특정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현대정 지회장은 “관리자가 노동자를 일대일로 면담하고 근무지 변경을 거론하며 협박한다. 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심고 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포스코법률지원단장은 “현장에서 관리자를 동원해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금속노조에 대해 악선전을 하고 있다. 관리자들이 텔레그램에 집단 가입해 노조 와해를 모의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와 포스코의 시나리오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에서 전사 차원으로 노조파괴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도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현직 임원 2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현대차 수사하랬더니 증거 없다는 노동부

판매연대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서울노동청, 고의 수사 지연으로 노동탄압 계속

노조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차의 판매연대노조 파괴행위 고소 120일이 지나도록 참고인 조사조차 없는 서울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노동부가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수시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자가 아닌 노

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노동부는 다는 수사를 늦출 명분이 없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정준영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대차 지본 앞에만 서면 직아진다.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시장명령을 내렸지만 유독 현대차그룹에 14년 동안 시장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노조 판매연대서울지회장은 “많은 대

리점 소장들이 현대차그룹이 ‘조합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대리점을 폐쇄하겠다’라고 협박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원청인 현대차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와 판매연대지회는 나영돈 서울노동청장과 면담했다. 나영돈 청장은 “증거가 없어 함부로 수사에 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 “노조파괴 금지 내용 없으면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

노조 충남·대전충북지부 유성 사태 해결 상경투쟁...노조와 유성기업 29일 아산공장서 직접교섭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의 직접교섭을 앞두고 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 올라와 유시영 회장과 유현석 사장이 사태 해결안을 들고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유시영 회장과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서울사무소 농성투쟁이 10일 차에 접어들었다. 노조는 10월 24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화를 시작하며 “유성기업지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교섭이 열린다. 모든 조합원이 힘을 모아 연말이 지나기 전 유성투쟁을 끝장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정세와 상황을 보면 올해가 유성기업 투쟁을 마무리할 적기라 생각한다. 갑을오토텍 투쟁을 정리한 여세로 유성투쟁을 끝장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노조는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를 막는 쟁점을 박겠다. 노조파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면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회사가 유시영 회장의 처벌 막으려고 교섭 시늉만 낸다면 금속노조가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유시영 회장이 나와서 8년 동안 끌어온 노조파괴 투쟁을 끝내는 교섭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정치권이나 노동부 등 온갖 기관들이 유성기업 8년 투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월 29일 교섭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사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와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여전히 ‘교섭으로 노조파괴 현안을 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 유성지분이 교섭을 게을리하고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임하면 지회는 더욱 강도 높은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점거 농성을 시작하며 유성투쟁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다짐했다. 올 12월 안에 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로 지회장들과 결의했다”라고 밝혔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부 총력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5일 연다. 유성기업지회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현장 조직화를 시작하겠다. 유시영, 유현석 부지는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다, 바로 잡자”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총파업 벌이고 상경... “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 결정하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상경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내리라고 촉구했다.

두 지회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국가인권위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차별시정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

두 지회는 10월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조속한 시정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두 지회는 “정규직과 같

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근무 형태는 물론 산업재해 사망사고 해결 과정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자본은 임금과 복리후생 차별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원·하청사가 작성하는 산업재해 보고서나 관련 자료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자주 일어나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현대제철 자본

은 안전문제조차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

이병용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투쟁사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권의 차별시정 권고를 애타케 기다리고 있다. 인권위는 자본의 눈치를 더 보거나 정치적 판단을 해서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노조와 두 지회는 조영선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차별철폐 소위원회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결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